



난항을 겪는 유로본드 도입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럽 재정위기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유로본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유럽 내외에서 강력히 제기됨.

- 유로본드 도입 논의는 프랑스 신정부의 주창으로 최근 다시 제기됨.
 - 프랑스 신정부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축보다 성장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 유로본드를 도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.
- 유럽위원회(EC)와 유럽의회는 유로본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유로본드 도입에 대해 찬성함.
 - EC는 그리스가 6월 17일 2차 총선 이후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재정위기 전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,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유로본드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식함.
- 유럽내부에서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반대를 표명하였던 일부 국가도 찬성으로 돌아섬으로써 유로본드 도입 지지 세력이 확대됨.
 - 이탈리아는 유로본드를 조속히 도입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, 오스트리아는 일부 형태의 유로본드는 논의할 만한 대안이라고 밝힘.
 - 유럽의회 대표단과 EU 27개 회원국 정부 대표가 유로본드 시험단계인 에너지 프로젝트본드¹⁾ 조기 도입에 합의하는 등 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임.
- 유로본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OECD와 IMF도 유로본드 도입을 적극 지지함.
 - OECD는 과중한 국가 채무, 취약한 은행 시스템, 과도한 재정지출 감축 등으로 형성된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로본드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.
 - IMF는 유럽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유로본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힘.

1) 프로젝트 본드는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발행해 도로나 철도, 통신 등 인프라에 투자하는 채권으로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개념에서 유로본드의 시험 단계의 성격을 가짐.

■ 그러나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유로본드 도입 논의는 이견만 재확인한 채 끝남으로써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되지 못함.

- 5월 23일 EU 정상회의에서는 유로본드뿐만 아니라 부실은행 지원안, 일부 유로존 국가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 지연 등을 둘러싸고 뚜렷한 대립각이 이어짐.
- 유로본드 도입 논의는 독일을 위시한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진척되지 못함.
 - 독일은 유럽 재정정책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로본드로 자금을 공동 조달하는데 반대하며, 유로본드가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 유로존 경제의 구조조정 압력이 사라져 유로존 성장에 오히려 역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함.
 - 네덜란드, 핀란드, 스웨덴 등은 재정 및 경제 개혁에 의해서만 유로존 성장이 가능하며, 유로본드가 도입될 경우 성장에 대한 기여 없이 독일과 자국의 국채 금리를 높일 뿐이라고 주장함.
- 일부 유로존 국가들과 독일 간의 국채 금리차가 급격하게 확대된 상황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할 경우 독일의 차입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 주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강경한 반대는 지속될 전망이다.
- 유로본드 도입은 6월 말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임.

(Financial Times 등, 5/23)